

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주요활동 및 계획 보고

대통령자문 「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」(위원장:김진애)의 주요 활동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

1. 추진경과

- 위원회 출범 및 위촉장 수여(’05.12.21) (☞위원회 구성 : 붙임1)
 - 현장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하여 건설·건축분야 학회·협회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는 「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연대」 결성(’06.2.22)
- 민간전문가(6개 특위) 중심으로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‘선진화 전략(로드맵)’(☞붙임2)을 마련하고,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보고회(’06.6.15)에서 보고
 - 4개 분야 12대 혁신과제(53개 세부과제)를 추진하고, 현장실천운동을 병행하여 Best-Practice 확산 및 제도화
-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별 액션플랜, 현장실천운동 추진,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·확정(’06.12.22)

2. 대통령님 지시사항 추진현황 (06.6.15, 선진화전략 보고회)

< 지시사항 >

- △ 혁신과제와 현장운동은 보고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문제발생시 대통령께 보고하며, 부처과건 인원수와 직급을 올리고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기획단을 보강할 것
- △ 특별건축구역, 글로벌스탠다드, 공공발주제도 등의 시범적용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, 행복도시 등에 적용
- △ 중앙과 지자체의 건축행정에 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 건축을 새로운 관점에서 컨설팅, 가이드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예산처·행자부 등에서 지원할 것

□ 건축을 가이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

-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으로 ‘건축도시공간연구소’를 설립키로 하고, ’07년 예산으로 설립비용 25억원 확보
- 국토연구원내 ‘설립추진위원회’를 구성(2.13)했고, 상반기중 출범 계획

※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계획(안)

- 구 성 : 30인(3연구부, 2센터, 1실)
- 운 영 : 별도 운영규정 제정 등 독립성 확보
- 기 능 : 건축도시 디자인 및 정책연구, 건축문화 관련 DB 운영 등

□ 특별건축구역·특별발주제도 도입 및 행복도시 등 시범적용

- 건축설계 창의력 극대화를 위해 건축제한(건폐율, 높이 등)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도입을 위해 3월중 건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예정
- 기술력 및 디자인능력 경쟁을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 등 특별발주제도 도입을 위한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개정을 추진중이며,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(재경부)
-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발주제도의 행복도시 시범적용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‘선진화위원회-행복청 협력 T/F’를 구성·운영중(’06.10~)

□ 건축행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

- 디자인전문가에 의한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복도시, 혁신도시(전남) 총괄계획가(MA/MP/DC)*제도 시범 적용중

* MA(Master Architect), MP(Master Planner), DC(Design Commissioner)

□ ‘선진화전략(로드맵)’ 추진 및 기획단 조직 보강

- 과제별 액션플랜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, 문제점 발생시 위원회에서 관계기관 이견 조정 등 적극 조치 계획
- 행자부와 기획단 정원조정 협의를 거쳐 부처 파견 5인을 증원하고, 전문계약직 1인 신규채용 추진중(별도정원 등 12 → 18인)

3. 위원회 주요활동 및 계획

지속추진과제 (선진화로드맵 과제)

□ 건축기본법 제정

- 건축문화의 육성기반 마련 및 건축관련 80여개 법령간의 조정을 위해 **건축기본법 제정안 발의**(’07.1.2, 강길부 의원)
 - 「**건축 기본이념**」으로 건강, 사회적 약자 배려 등 ‘공공성 확보’, ‘자연과 공생’, ‘산업적 경쟁력 제고’, ‘창의성 존중’ 등을 설정
 - 국가 및 지자체는 건축 기본이념 실현을 위해 「**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**」 수립·시행
 - 각 부처에 건축규제의 일관성·연계성을 확보하고 규제 신설을 통제하는 「**건축규제 통합관리**」의 제도적 근거 마련

□ 도시활력을 높이기 위한 ‘복합커뮤니티센터’ 조성

- 지역공동체 형성,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(공원, 청사, 문화시설 등)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‘복합커뮤니티센터’ 시범 도입
 - * 행복도시 첫마을, 남양주 별내지구, 파주 운정지구 건설계획에 반영
- 시범사업 모니터링, 지역별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구시가지 정비, 여타 신도시 확산을 위해 **연구용역 병행**(’06.6~’07.3, 건교부)

□ 설계·엔지니어링 육성, 예산절감 등을 위한 설계비 체계 개편

- 현행 ‘공사비요율방식’은 최적설계가 곤란하고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문제가 있어, 국제기준인 ‘**실비정액방식(업무량 비례)**’ 도입 추진중
 - *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 추진중이며, 과기부는 ‘08년초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을 변경할 예정

□ 현장실천을 위한 건설기술·건축문화 ‘선진화연대’ 운영

- 4개 분과 실무협의회를 운영중이고 선진화포럼을 4회 개최했으며, 금년부터는 51개 회원단체와 협력하여 **Best-Practice** 현장실천운동을 강화할 계획

※ 선진화포럼 현황(☞붙임3)

- 1차(’06. 4.26) : 우리 건축·시설물에서 걸작이 나오지 못하는 6가지 이유
- 2차(’06. 7.14) : 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전략과 Best-Practice사업 추진
- 3차(’06.11.15) : 지속가능한 SOC 시설물의 현재와 미래
- 4차(’07. 3. 7) : A(건축설계)·E(엔지니어링)·C(시공)의 관계정립과 발전방안

□ ‘이달의 건축환경문화’ 선정·홍보

- 건축 및 지역가꾸기에 대한 관심 증진을 위해 ’06.4월부터 ‘이달의 건축환경문화’를 선정*·홍보중이며, 자료집 발간 등 추진 계획

* 선유도 공원, 전주한옥마을, 울산대공원, 박수근미술관 등(☞붙임4)

신규추진과제

□ 한옥건축 보급 확산 및 한국문화성 확산

- 건축도시공간을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, 새로운 한옥 건축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
- 연구용역(’06.12~’07.3), 심포지엄(’07.3.8)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정하고, 행복도시·혁신도시 등에 우선 적용 추진

□ 건설·건축분야 갈등과제 등 해결

- 건설·건축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기관 이해갈등으로 인한 장기 미결과제* 등을 신규 아젠다로 설정할 필요

* 건축 설계·시공 검업 문제, 엔지니어링 관련 부처소관 조정(과기부, 건교부), 턴키제도 개선, 민관협력 해외시장 개척, 건설보증보험제도 개선 등(☞붙임5)

- 전문가 중심의 ‘정책기획연구그룹(15인)’을 운영하고, ‘선진화 연대’를 통한 갈등 조정 등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 추진

□ 건축문화 관련 행사 추진

- ‘건축정책 국제컨퍼런스’와 ‘이달의 건축환경문화’ 시상, 발주혁신 격려를 위한 ‘좋은 건설발주자’ 선정 계획(6월경)

□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조사 실시

-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(’07년: 중앙 147건 4조9,183억원, 국고지원 397건 3조 2,442억원)을 일제조사하여 체계적인 사업평가 및 지원시스템 마련

4. 검토의견

- '06.6월 대통령님 참석 보고회에서 보고된 다양한 혁신과제가 착실히 진행중이나, 갈등과제 해결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 예상
 - ⇒ 위원회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관계기관간 이견 등으로 추진이 미흡한 과제는 BH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하여 이견을 신속히 조정

- 아름다운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,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행사 활성화 필요
 - ⇒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, 언론을 통한 홍보로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국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, 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도록 관리

※ 위원회는 건축문화 선진화에 대한 정부 의지 강조 및 관계자 격려를 위해 위원회 주관행사에 대통령님 참석을 건의하고 있는 바,
- 행사의 성격·중요도 및 대통령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BH 내부협의를 거쳐 대통령님 참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

<붙임 1>

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구성

□ 민간위원 : 14인

구분	성명	연령	주요경력
위원장	김진애 (金鎭愛)	54	· 서울포럼 대표 ·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위원(05-현)
위원	강미선 (姜美先)	42	·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(98-현) ·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(04-현)
	권오경 (權五硬)	48	· (주)한미파슨스 상무(01-현) ·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(05)
	김종희 (金鍾熙)	42	· SOC건설경제연구원장(03-현) ·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위원(04-현)
	김혜란 (金惠蘭)	45	· (주)경화엔지니어링 상무(05-현) ·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주임연구원(87-94)
	김혜정 (金惠貞)	53	·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(92-현) · 한국여성건설인협회장(02-04)
	박철수 (朴哲守)	48	·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(02-현) ·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(02-현)
	성종상 (成鍾祥)	46	·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(03-현) · 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회 전문위원(04-현)
	은영태 (溫泳泰)	58	· 경희대 토목건축공학부 교수(98-현) ·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(94-01)
	이학기 (李學基)	50	· 동아대 건축학부 교수(97-현) · 대한건축학회 시공위원회 부위원장(04-현)
	임정순 (任晶淳)	61	· 경기대 산업정보대학원장(05-현) · 한국방재학회장(05-현)
	정기용 (鄭奇溶)	62	· 기용건축 대표(86-현) · 민예총 민족건축협회의회장(95-현)
	조성룡 (趙成龍)	63	· 조성룡도시건축 대표(95-현) · 문화다양성포럼 공동대표(05-현)
	최 일 (崔 壹)	52	·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(90-현) · 동경대 건축학과 객원연구원(94-95)

□ 정부위원 : 14인

- **관련부처 장관** : 재경부·과기부·행자부·문화부·농림부·산자부·복지부·환경부·노동부·여성부·건교부·해양부·예산처·국조실

<붙임 2>

‘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전략’ 개요

□ 우리의 수준 진단

- 3차원 건축·도시 공간관리가 간과되고 교량 등 SOC시설도 경제성 위주로 건설되어, 동남아 신흥도시보다 경관이 열위
- ‘R&D 투자’ 부족(타분야의 1/3 수준), ‘運札制’ 등 공정성 위주의 획일적인 경쟁시스템으로 건설기술 경쟁력이 한계에 직면

□ 국내외 혁신사례 분석

- 스페인(빌바오시티), 프랑스(미테랑 프로젝트) 등 ‘건축혁신’과 미국(R&D 확대), 영국(Best-Practice 사업)의 ‘건설혁신’ 사례의 효과 확인
- 우리나라도 ‘헤이리 문화마을 조성’, ‘건설산업 규제합리화’(규개위) 등 부문별 혁신이 추진중으로 범정부적 역량 집중, 정책조정 필요

□ 선진화 방안

- 비전 : ‘좋은 환경, 좋은 건축 21’을 슬로건으로 ‘건설산업을 3D에서 3C(Creative, Credible, Competitive)로 전환’
- 목표 : 2015년 ‘건축문화강국 진입’, ‘건설생산성 향상’(사업기간 50%, 사업비 30% 감축), ‘해외시장 점유율 5위 달성’
- 전략 : 제도적 기반 마련, 선도 프로젝트 등 ‘12대 핵심과제’ 수행과 병행하여, 현장 중심의 실천을 위한 ‘현장실천운동’ 전개

□ 12대 핵심과제

▶ 건축문화 혁신 기반 조성

- ① 건축기본법 제정, 특별건축구역 도입 등 건축/경관제도 정비
- ② 총괄계획가(DC/MA/MP) 도입, 설계경기 활성화 등 디자인 전문가 활용
- ③ 건축도시연구원, 건축도시문화관 건립 등 지원네트워크 구축

▶ 공공 선도프로젝트 시행

- ④ ‘이달의 건축환경문화 선정’, ‘올해 건축의 도시 축제’ 등 이벤트
- ⑤ 국가대표 건축 확보, 지역 명소화사업 지원 등 ‘우수 건축물’ 기획
- ⑥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입, 도시재정비모델 개발 등 공동체 환경 조성

▶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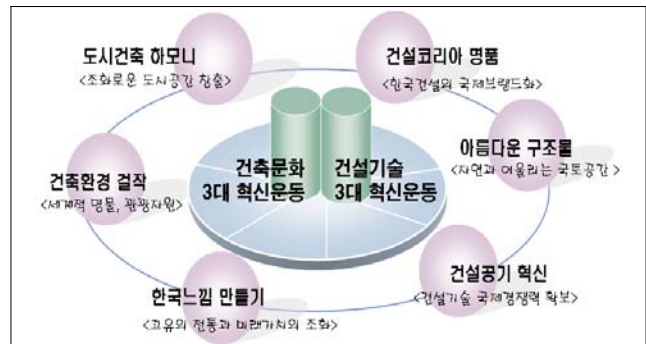
- ⑦ 초고층 복합건축, U-Eco City 등 일류 건설 R&D 프로젝트 추진
- ⑧ 건설신기술 성능보험제도 도입 등 신기술 개발 활용 지원
- ⑨ 건설교통 R&D 투자·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화

▶ 글로벌스탠다드 생산 체계

- ⑩ 가치경쟁, 최고가치낙찰제 등 기술경쟁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
- ⑪ 성능중심 건설기준 도입 등을 통한 설계품질 및 기술력 제고
- ⑫ 컨소시엄 방식 수주, 해외전문가 DB 확충 등 글로벌네트워크 구축

□ 현장실천운동

- 건설기술·건축문화선진화연대 (학회, 협회 등 51개 단체) 주축
- Best-Practice 사업 지정,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확산



□ 추진계획(목표연도 2015년 : 단기 '07년, 중기 '08년, 장기 '15년)

- '07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법령개정 마무리 및 행복도시 등 시범 적용
- '08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반적 제도개선 추진
- ※ 성과에 장기간 소요되는 R&D 연구개발은 '15년까지 단계별 진행

<붙임 3>

‘건설기술·건축문화 선진화포럼’ 결과

□ 제1차 포럼

- 일시·장소 : ’06.4.26, 코엑스
- 주요내용
 - ‘우리 건축·시설물에서 결락이 나오지 못하는 6가지 이유’ 지적
 - 프로젝트 기획능력 부족 · 설계자 선정의 경직성
 - 공사비기준 설계대가 · 사업특성 고려없는 획일적 발주방식
 - 일관적인 공사 감독 부재 · 디자인전문가의 체계적 참여 부족
 - 세계적인 결락품 탄생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
 - 기획전문가(Project Manager) 제도화
 - 설계자 선정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 - 총괄계획가(DC/MA/MP) 방식, 디자인 감리 도입 등

□ 제2차 포럼

- 일시·장소 : ’06.7.14, 코엑스
- 주요내용 : 선진화전략과 연계한 **Best-Practice** 추진방안 논의
 - 工期혁신을 통한 고품질·저비용 공동주택 시범사업(주공)
 - 주민편의 증진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-City 시범사업(토공)

□ 제3차 포럼

- 일시·장소 : ’06.11.15, 코엑스
- 주요내용 : 지속가능한 **SOC** 시설물의 현재와 미래
 - 초장대교량, 초고층빌딩, 해저터널 등 첨단 설계능력 국산화 필요
 - 미래사회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기술개발에 역량 집중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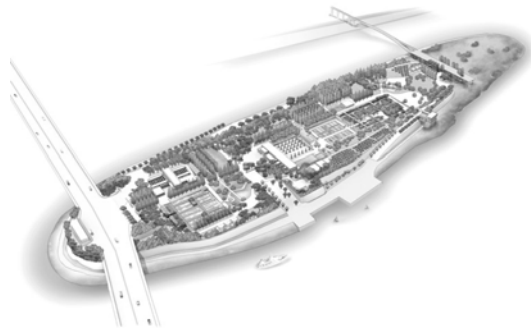
□ 제4차 포럼

- 일시·장소 : ’07.3.7, 코엑스
- 주요내용 : **A(건축설계)·E(엔지니어링)·C(시공)의 관계정립과 발전방안**
 - A·E·C의 고유업무와 관계정립(겸업허용 관련 갈등 조정)
 - A와 E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등

<붙임 4>

‘이달의 건축환경문화’ 선정 결과

- 선유도공원('06.4월, 서울)
 - 폐기된 정수장을 활용한 공간 재생
 - 도시환경의 모범사례(재생의 미학)



- 전주 한옥마을('06.5월, 전북)
 - 한옥민박, 상점 등 전통공간과 현대의 조화
 - 마을가꾸기 등을 통한 전통가치 보존



- 웰컴시티('06.6월, 서울)
 - 여러개의 마당, 담장으로 구획된 전통주택 공간체계를 현대적인 공공공간으로 적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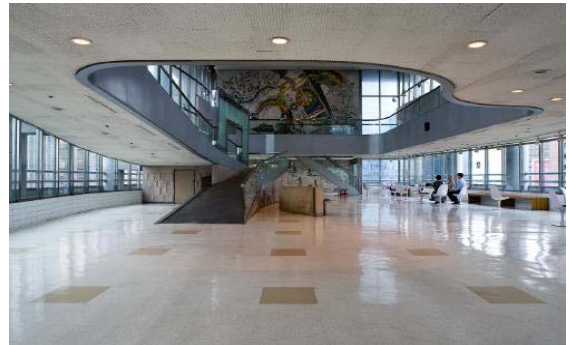
- 울산대공원('06.7월, 울산)
 -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성(SK(주))
 -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전통적 자연관을 반영



- 립스코스모치과('06.8월, 대전)
 - 소규모 건물로서의 조형성 탁월
 - 건물 내부와 외부를 자연스럽게 연계



- SK네트웍스빌딩 하늘공원('06.9월, 서울)
 - 건물 10층을 2층 구조의 공원으로 제공하고, 격조높은 공간구성으로 신 패러다임 제시



□ 박수근미술관('06.10월, 강원)

- 대지와 조화, 예술품 전시를 위한 자연스런 디자인(양주군청과 주민의 협력사업)



□ 김옥길기념관('06.11월, 서울)

- 김옥길여사를 기념하여 솔직함, 절제, 생략을 표현한 한국 현대건축의 수작



□ 원효대교('06.12월, 서울)

- SOC시설에 미관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, 시대를 앞서간 첨단공법 적용



□ 무주군 공공건축물('07.1월, 전북)

- 유능한 건축가와 협력하여 군내 31개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(지역공간 혁신)



□ 서울시립미술관('07.2월, 서울)

- 근대 건축물을 보존 우수사례 (해방전 경성재판소 리노베이션)



<붙임 5>

건설·건축분야 장기 미결과제 개요

□ 건축설계·시공 겸업 허용

- '90년 중반부터 '건축설계(Architecture)', '엔지니어링(Engineering)', '시공(Construction)'간 겸업허용으로 다양한 조합에 의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

※ 엔지니어링, 시공은 '92년부터 겸업 허용

- 건축사 단체 등은 영세 설계업이 거대 시공사에 종속되고, 지나친 이윤추구로 건축디자인의 퇴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반대(시위 등 집단행동)

□ 고부가 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법령체계·부처소관 조정

-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선정, 용역관리 등은 건교부(건설기술관리법), 용역업자 등록, 대가는 과기부(엔지니어링진흥법)가 담당하는 二元체제
 - 건설 R&D 투자, 설계·시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곤란
 - 건교부는 권한 부재, 과기부는 건설 전문성 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
- '건설전문가'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련법령의 건교부 일원화를 희망(설문결과 87.3% 찬성, '06.7)하고 있으나, '과기부'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야(건설, 조선, 환경)의 수평적 통합관리가 유리하다는 입장

□ 민관협력에 의한 해외진출시스템 구축

- 정부지원, 해외시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, 개별 기업단위로 추진되어 해외건설시장 경쟁력 상실 위기(플랜트만 경쟁력 보유)
 - ※ 수주('97→'06년) : 건축(61→34억불), 토목(26→15억불), 플랜트(46→109억불)
- 민간주도의 수주전문회사(정보, 기술력, 인력 공유, 화란 NEDECO社 모델) 설립과 체계적인 정부지원 강화(발주단체 고급정보 수집, 자금 지원) 필요

□ 턴키제도 발주제도 선진화

- 70년대 턴키발주방식 도입후 건설품질 제고 등 성과가 많은 반면, 공정성·투명성 논란, 건축사~시공사, 대형~중소업체 갈등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, 제도적 해결책 마련 필요

□ 건설보증제도 개선

- 건설보증제도가 부실업체 선별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, 형식적 절차로 기능
- 보증기관의 전문성, 심사능력 강화 등을 위한 근본대책 필요

□ 기술전문인력·기능인력 수급 및 고령화 대책

- 양질의 기술·기능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로 건설산업 성장잠재력 저하, 부정적 산업이미지를 극복하는 장기적 해결책 마련 필요

□ 건축설계업 육성 방안

- 디자인·품질보다는 가격 경쟁, 신진건축가의 활동기반이 취약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필요